

국내 철강, 美관세로 4000억 증발 50% 고율부담에 수출·이익 직격탄

포스코·현대제철, 납부액 급증

올해 총 2억8100만달러 추산
6월 이후 부과율 두 배 상승
분기 이익 상당액 잠식 우려
정부 협상 지연에 불만 고조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가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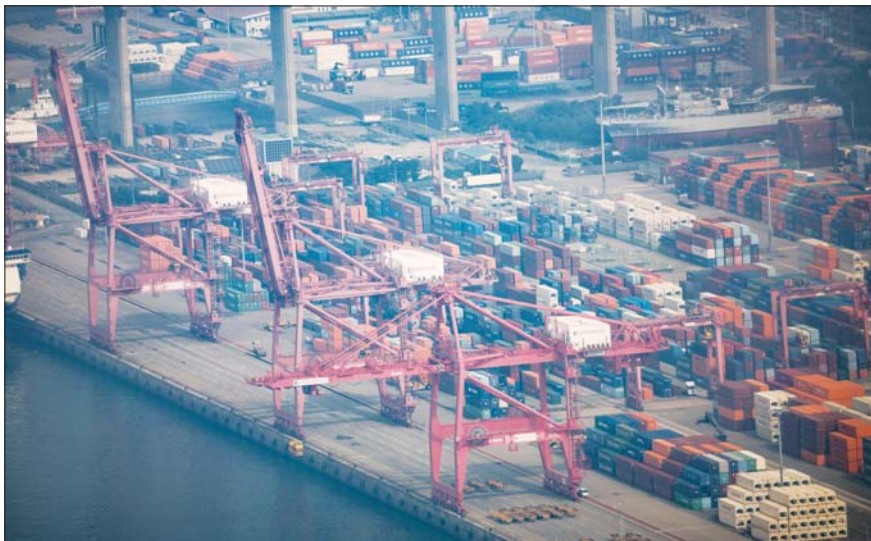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속에 미측이 6월부터 관세율을 50%로 상향하면서, 두 회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1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현대제철로부터 제출받은 ‘대미 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두 회사의 납부액은 총 2억8100만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사 2분기 영업이익의 합계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상사가 제품별로 나눠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회사별 세부 납부 금액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월별 납부액은 △3월 1150만달러 △4월 1220만달러 △5월 3330만달러 등으로, 관세율 25%가 적용된 기간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관세율이 50%로 인상되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뉴시스

면서 납부액이 4260만달러로 급등,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세는 총 1억4700만달러(약 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관세는 월평균 3000만달러 이상씩, 총 1억34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상반기와 평년·전년 수출량,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한국철강협회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전방산업 경기 둔화와 고율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상반기보다 약 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철강 수출량은 173만톤(21억4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3월 관세 25% 부과 당시엔 미국 내수가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유지됐지만, 6월 이후엔 사실상 급감세”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철강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타격도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6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

해, 연간 부관세 수입 허용량을 전년 대비 약 47% 축소한 1830만 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 제도는 철강 제품이 실제로 조강(melt and pour) 공정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규모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수영 의원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분기 영업이익을 올해 대미 관세 납부에 모조리 써야한다”며 “우리 철강 업계는 미국에게 관세 50% 직격탄을 맞고 이번 EU(유럽연합)의 관세 50% 부과 계획 발표까지 더해져, 불난 집에 벼락 맞은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을 언급하며 “뺄을 떼면 뺄아보라”는 식의 반미 버티기 방식으로는 기업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돈자조금, ‘슈퍼 한돈 페스타’ 개막

성수동서 19일까지 체험형 팝업

한돈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한 ‘슈퍼 한돈 페스타’가 서울 성수동에서 막을 올렸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2025 슈퍼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를 개막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한돈데이는 돼지 코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1001’을 모티프로 한 한돈 대표 기념일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행사 첫날에는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선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등 협력사 관계자, 소비자 단체 대표, 한돈 명예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11일 개막 직후 현장에는 성수동 특유의 ‘핫플 감성’을 즐기려는 20~30대 방문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와 야외를 아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에서 개막한 ‘슈퍼한돈 페스타’에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러졌다. 실내 ‘슈퍼한돈 에너지 타운’은 ▲단백질 보충 정육점(안심 무게 맞추기) ▲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미션을 완수하면 스탬프를 모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로 교환할 수 있다.

‘한돈파트너스스토어존’에는 선표식품(차오차이), 와인플러스, 롯데 돼지바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협업체 한돈과 어울리는 푸드·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 ISO 기술이사회 이사국 연임 성공

산업부, 2028년까지 기술정책 참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47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 B, Technical Management Board)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ISO 기술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문영준 K AIST 초빙교수를 대표로 ISO의 핵심 정책결정 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TMB는 ISO 내 표준위원회의 신설·해산, 의장국 임명, 분야 간 조정 등 표준화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연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기술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련했다는 평가다.

또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신규 표준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설립을 제안하고, 회원국 대상 워크숍을 직접 주관했다. 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AI 표준 서밋’ 참석을 주요 인사들에게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나섰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첫 국감, ‘에너지·원전 정책’ 정조준

14일 환노위, 통합 컨트롤타워 검증대
재생 100GW·신규 원전 공론화 쟁점
여야, 정책혼선·전환속도 충돌 불가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방향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뒤 처음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 국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올해부터는 환

경노동위가 에너지 분야를 함께 다루게 됐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진흥 업무 이관 이후 드러난 정책 혼선과 산업계 불확실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원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기후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주체로서 12차 계획부터 주도권을 쥐게 됐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새 전기본에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전환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확인했다.

반면, 원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거

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를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과 간헐성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질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의 환경 분야 핵심 정책인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댐 사업 중단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해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환경 공약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마늘·보리 농가, ‘수입안정보험’으로 대비”

농식품부, 가격 급락 땀 손실 전액보상
올해부터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연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던 한계를 보완해, 수입(收入) 변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처럼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 품목은 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 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만큼,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